

“건강검진? 실 새도 없어요” 야간근로자 ‘産災 사각지대’

51곳 중 27곳서 법 위반 적발
사업장 17곳에 과태료 5100만원
일부 사업장, 휴게 시설도 없어

새벽배송 등을 위해 밤 늦게까지 일하는 노동자 다수가 건강 검진을 받지 못하고, 제때 쉬지도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사업장은 냉·난방 등 야간에 노동자들이 쉴 수 있는 휴게시설도 갖추지 않았다. 정부는 법 위반이 적발된 사업장들에게 수천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고용노동부는 유통업과 물류업, 제조업 등 야간 근로자가 많은 3개 업종 51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과 노동환경 실태조사 한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그 결과, 51곳 중 절반이 넘는 27곳에서 총 83건의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근로기준법상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일할 때 야간 근로로 본다. 해당 사업장은 야간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반드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휴게시간 준수, 휴게시설 설치 등도 의무화돼 있다.

특히, 유통과 물류업의 경우 코로나 19로 업무량이 늘어 야간 근로가 크게 증가했지만, 이들 근로자에 대한 관리



새벽배송 등 야간 근로자들이 과로사 방지를 위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는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독 결과 51곳 중 17곳(33%)은 이들을 대상으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았다. 고용부는 17곳 사업장에 과태료 총 5100만원을 부과했다. 제조업 2곳과 운수창고업 1곳은 휴게시설도 없어 고용부가 시정지시를 했다.

또, 15곳은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지 않아 과태료 총 4900만원을 납부하게 됐다.

이밖에 휴식시간을 지키지 않고, 연장·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근로기준법 위반도 43곳에서 총 95건이 적발됐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이 4시간일 경우 휴게시간 30분, 8시간일 경우 휴게시간 1시간을 줘야 한다.

고용부 실태조사 결과 야간 노동자 10명 중 4명은 1일 평균 8시간 이상 밤 늦게까지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43%는 1일 야간근로 중 휴식시간이 1시간 미만이었다.

야간근로를 하는 이유로 절반 이상인 55.8%가 ‘수당 등 경제적 이유’를 꼽았다. 이어 ‘교대제 등 근무체계’, ‘개인적 생활 여건’ 순으로 답했다.

박화진 고용부 차관은 “야간 근로는 노동자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기업의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중요하다”며 “정부는 내년 8월부터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되는 만큼 세부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metroseoul.co.kr

韓-獨, 배터리 분야 등 표준협력 강화

‘제2차 한-독 표준협력대화’ 개최
기술 개발·표준화 상황 등 공유

한국과 독일이 배터리·미래차·스마트제조 분야 표준협력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4일 그랜드 하얏트 서울 호텔에서 독일 국가표준화대표기관인 독일표준원(DIN), 독일전기전자기술위원회(DKE)와 ‘제2차 한-독 표준협력대화’를 개최하고, 양국 기술표준 전문가들은 ‘2021 한-독 표준 컨퍼런스’를 통해 배터리·미래차·스마트제조 분야 기술 개발과 표준화 추진 상황 등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번 표준협력대화부터 양국의 표준협력 범위에 배터리를 추가, 우리나라 차세대 배터리와 고용량 에너지저장장치 등 배터리 분야 국제표준화에 있어 독일과의 협력이 기대된다.

이날 표준협력대화에서 열린

‘2021 한-독 표준 컨퍼런스’에서는 ‘인더스트리 4.0’ 참시자인 헤닝 카커만 박사(전 공학한림원장)는 ‘디지털 경제와 순환 경제의 공동 창조’ 주제 기조 강연에서 디지털 경제에서의 신뢰를 기반으로 한 협업을 강조하며 순환 경제에서 자원을 적게 소비하며 경제 성장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한순홍 교수는 ‘한국의 산업자동화 및 스마트 제조 표준화 협력’을 주제로 한 기조 강연에서 우리나라 스마트제조 표준화 현황을 소개하고 디지털 트윈 등 양국이 협력할 수 있는 분야를 제시했다.

기조 강연에 이어 진행된 기술 발표에서 양국 전문가들은 배터리 안전과 표준화, 소재·부품·장비 분야 한-독 기술협력, 스마트 기술의 사이버보안 표준화 적합성 평가 등을 발표하고 기술 개발과 표준화 추진 상황을 공유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하도급 계약 갑질’ 르가든, 과징금 3.6억

일방적으로 현장 철수 지시

건설업체 르가든이 하청업체와 맺은 공사위탁을 일방 취소하는 등 갑질을 일삼은 것으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르가든이 수급사업자에게 기계설비 공사 등을 건설위탁한 후 일방적으로 위탁을 취소한 행위, 추가공사가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계약서를 발급해 주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6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르가든은 2018년 6월경 수급사업자에게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르가든8차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 공사 등을 건설위탁했으나, 2019년 3월경 르가든에 공사 현장에서 철수할 것을 일방적으로 지시했다. 이에 수급사업자는 특별한 잘못을 하지 않았음에도 자신의 의사에 반해 공사현장에서 철수했고, 이후 르가든으로부터 위

탁 취소와 관련한 정당한 보상도 받지 못했다.

르가든의 이런 행위는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충분한 협의 없이 임의로 위탁을 취소한 행위로서 하도급법 제8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위탁 취소 행위에 해당한다.

르가든은 또 2019년 3월경 주방 배기구 각도 변경 공사 등 원래의 공사내용을 추가·변경하는 공사가 있었음에도 이를 반영한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로 하여금 수급사업자가 추가·변경 공사에 착공하기 전 수급사업자에게 추가·변경 공사 관련 서면을 발급토록 하고 있다. 거래당사자간 계약내용을 명백히 하고, 향후 분쟁 발생시 사실확인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해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당사자간 사후분쟁을 미리 막기 위해서다.

/세종=한용수 기자

지혈대·응급조치킷도 미흡대

유엔사 사진 속 사라진 한국군의 전투적 사고



문형철 기자의
어수선하루

유엔군사령부(UNC)는 지난 22일 강원도 철원군 화살머리 고지에서 유해발굴 작전을 지원하는 관계자들을 격려하며 UNC 공식홈페이지에 몇 장의 기념사진을 올렸다. 사진에 등장한 한국군과 UNC 소속 호주군은 큰 차이를 보였다. 단지 몇장의 사진이었지만, 그 속에서 양국의 전투적 사고 차이를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접적지역인 화살머리 고지를 방문한 호주군의 개인전투 장비는 철저히 전투적 사고에 입각한 차림새였다. 호주군의 방탄복은 개인화기의 공격으로부터 신체 주요 부위인 ‘킬 박스’를 완벽하게 가려주고 있었다. 더욱이 호주군 3명 모두 가슴에는 응급조치용 지혈대를 부착했고, 응급조치킷이 들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파우치를 휴대하고 있었다.

방탄헬멧에는 야간투시경을 달수 있는 고정형 슈라우더가 부착됐고, 전술적으로 계급은 부착하지 않았다. 대신 방탄복 가슴에 한국군을 배려해 한국군 계급이 표기된 규격화된 저시인성 이름표를 부착했고, 저시인성 흑색 마



유엔군사령부가 지난 21일 공식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 유엔사 소속 호주군 3명의 가슴(붉은 원)에는 응급처치용 지혈대와 민사작전 개념을 적용해 한국군 계급과 이름이 새겨진 이름표가 부착돼 있다. /유엔군사령부 페이스북

스크와 카키색 계열의 방한두건인 발라클라바를 코까지 덮고 있었다.

UNC의 일원으로 정전감시 활동이 임무이기에 호주군이 교전을 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그렇지만, 호주군은 전원이 전투적 사고에 입각한 장비와 복장을 착용하고 있었다. 상비군 6만명과 예비군 2만명의 비교적 적은 병력을 운용하는 호주군이지만, 해외 각지에 전투과병을 나가는 군대답게 각개 군인들은 전투적 사고가 자리잡고 있다.

반면, 기념사진에 함께 등장한 한국군은 북한과 접한 휴전국가 군인임에도 접적지역에서 전투적 행동이 미흡해 보인다. 야간투시경 부착용 어댑터를 부착한 방탄헬멧을 쓴 군인은 한명도 없었다. 한국군 중에 가장 선임으로 보이는 육군 대령만 방탄헬멧에 큼직한 계급장을 부착했다. 비상시를 대비한 지혈대와 응급조치킷도 휴대하지

않았다. 심지어 한국군 5명 중 2명은 마스크를 내리고 있었다. 한국군이 착용한 다목적 방탄복(위리어플랫폼 1형 방탄복)은 소총견착 사격과 앞드려 쏘사격이 매우 어렵다. 때문에 야전에서는 총을 쏘기 위해 킬박스를 노출시키는 다소 이상한 형태로 임의개조를 해서 입고 있는 실정이다.

육군은 최근 미군 등 나토군이 적용하고 있는 전술적 응급조치인 TCCC를 도입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하지만 군에 보급되는 응급조치킷은 중국제품이다. 심지어 특별한 상황이 없을 경우 의사의 지시없이 임의로 지혈대를 풀어서는 안됨에도 보급용 지혈대의 사용설명서에는 과사를 막기 위해 30분마다 풀어야 한다고 쓰여 있다.

/captinm@

중국산 타이어 안전 부적합... 리콜 명령

〈제크노바, 젠코〉

국표원, 車 타이어 77개 제품 조사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자동차 타이어 77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조사를 실시해 안전기준 부적합 2개 제품에 대해 수거등의 명령(리콜명령)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리콜명령을 받은 제품은 제크노바(Zeknova) 브랜드의 ‘RS606 R4’ 모델과 젠코(GENCO)의 ‘GENCO G7’ 모델 두 개 제품으로 모두 중국산 수입 타이어이다.

두 타이어는 고속성능 기준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제크노바 타이어는 고속 주행 시험 중 슬더부가 파손돼 주행시 자체 파손으로 인한 상해 위험이 확인됐다. 젠코타이어 역시 고속 주행 시험 이후 사이드월 파손이 확인됐고, 수입자명과 주소, 전화번호 등이



제크노바 타이어 주행시험 이후 파손이 확인된 모습 /국표원

표시되지 않아 표시사항 미비도 지적됐다.

국표원은 “두 타이어는 순차적으로 속도를 높여가면서 내구성을 확인하는 시험 이후 손상이 발생한게 확인됐다”며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하라”고 당부했다.

이들 리콜 제품은 전국 유통매장과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돼 시중유통이 차단됐다.

/세종=한용수 기자